

이 자료는 2026년 7월 21일 朝刊부터	보도자료 (시흥상공회의소)	담 당 과	기업지원팀
		담 당 자	박민재 주무관
		전화번호	070-4485-9967
본 보도자료는 시흥상공회의소 인터넷(http://shiheungcci.korcham.net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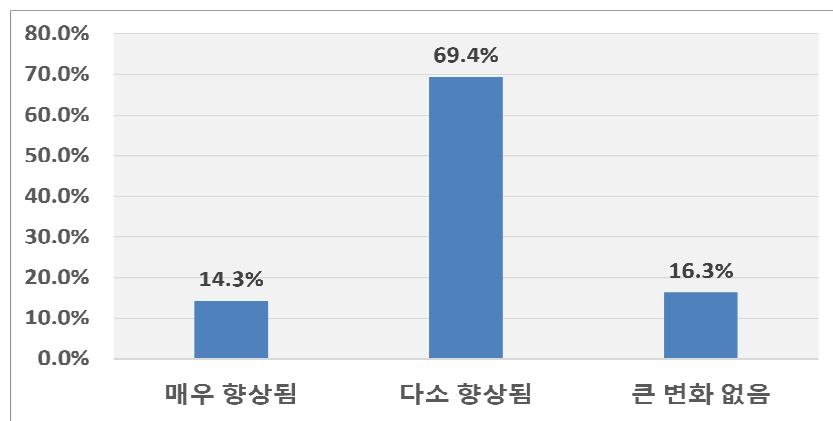
제 목 :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 및 업계의견 조사

시흥상공회의소는 시흥지역에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 및 업계의견을 조사한 결과, 총 98개사가 응답하였다고 밝혔다.

조사 결과,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보건 관련 예산 마련과 전문인력 확보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, 방대한 법 준수 사항과 근로자 안전인식 관리, 법적의무 이행 여부 확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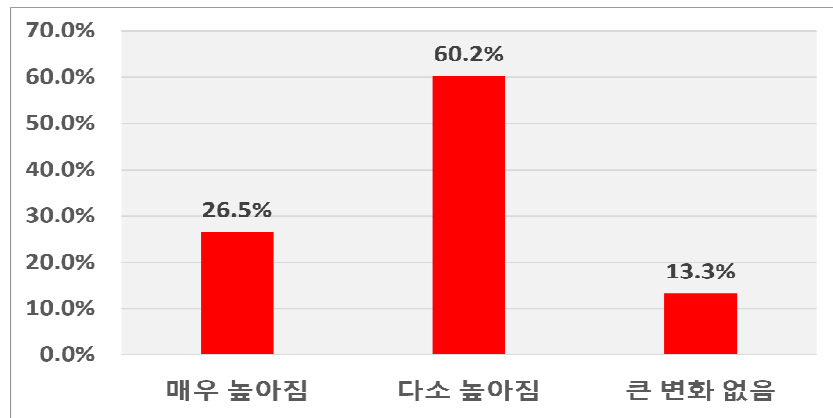
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수준과 작업환경 안전성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69.4%가 '다소 향상됨', 14.3%가 '매우 향상됨'이라고 답해, 전체의 83.7%가 안전관리 수준과 작업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반면 '큰 변화 없음'은 16.3%로 조사됐으며, '오히려 저하됨'이라는 응답은 없었다.

<법 시행 이후, 안전 관리 수준 및 작업환경 안정성 변화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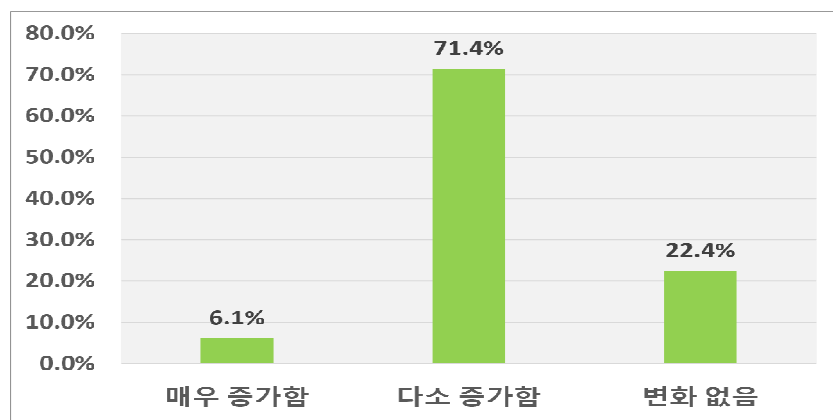
법 시행 이후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인식 변화에 대해서는 '다소 높아짐'이 60.2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'매우 높아짐'은 26.5%로 조사됐다. 이에 따라 응답기업의 86.7%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인식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. 반면 '큰 변화 없음'은 13.3%로 나타났으며, 안전인식이 낮아졌다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.

<법 시행 이후,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인식 변화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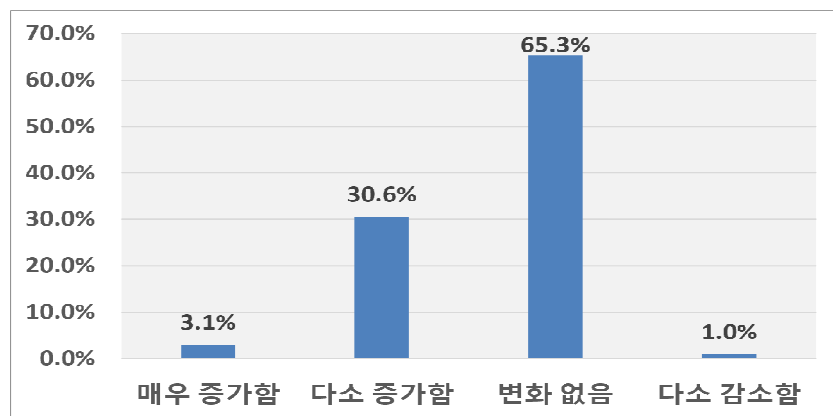
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예산 변화에 대해서는 '다소 증가함'이 71.4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'매우 증가함'은 6.1%로 조사됐다. 이에 따라 응답기업의 77.5%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예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. 반면 '변화 없음'은 22.4%였으며, 예산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없었다.

<법 시행 이후, 안전관리 예산 변화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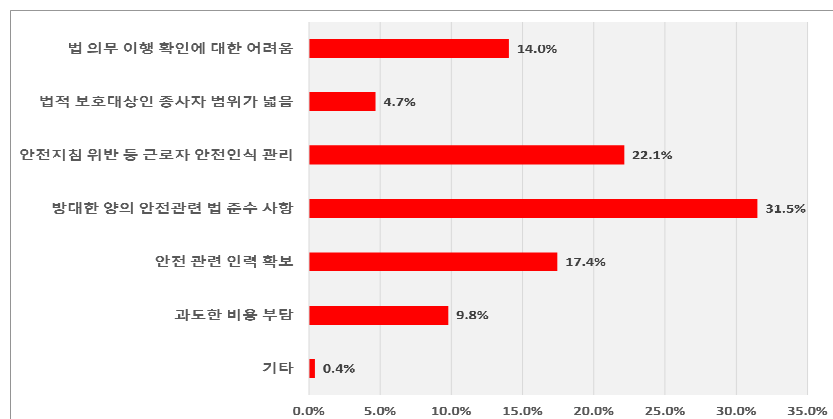
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전담 인원 변화에 대해서는 '변화 없음'이 65.3%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. 이어 '다소 증가함'이 30.6%, '매우 증가함'이 3.1%로 조사돼, 전체 응답기업의 33.7%가 안전관리 전담인원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. 반면 '다소 감소함'은 1.0%에 그쳤다.

<법 시행 이후, 안전관리 전담 인원 변화>



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기업이 겪는 어려움으로는 '방대한 양의 안전 관련 법 준수사항'이 31.5%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. 이어 '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인식 관리'가 22.1%, '안전 관련 인력 확보'가 17.4%, '법 의무 이행 확인의 어려움'이 14.0%로 조사됐다. 또한 '과도한 비용 부담'은 9.8%, '법적 보호대상인 종사자 범위가 넓음'은 4.7%, '기타'는 0.4%로 나타났다.

<법 시행 관련, 겪고 있는 어려움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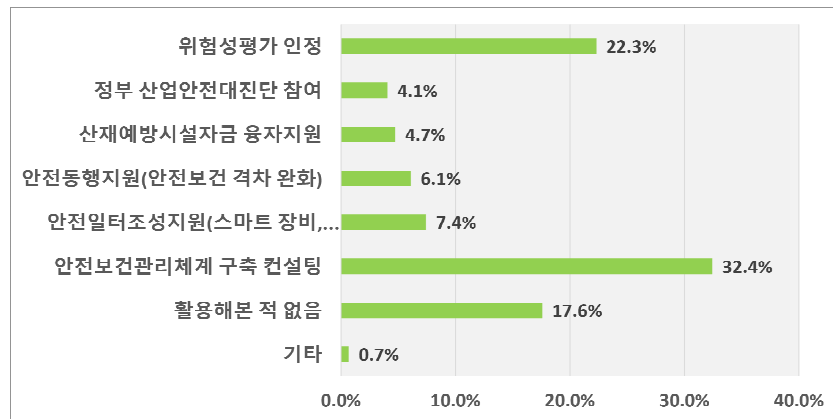
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가운데 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항목은 '안전보건 인력·시설·장비 구비에 필요한 예산 마련'으로 조사됐다. 이어 '안전보건 업무 총괄 관리 전담조직 설치', '안전보건 관리자·관리담당자 등 전문 인력 배치' 순으로 나타났다.

<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부담사항 순위 선택 통계>

구분	1순위 구성비(%)	2순위 구성비(%)	3순위 구성비(%)
안전보건 인력, 시설, 장비 구비에 필요한 예산 마련	29.2	13.8	21.7
안전보건 업무 총괄 관리 전담조직 설치	27.1	18.1	6.5
안전보건관리자, 관리 담당자 등 전문 인력 배치	9.4	22.3	17.4
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	12.5	3.2	21.7
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	7.3	17.0	5.4
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위험 시 예방조치 매뉴얼 마련	4.2	9.6	6.5
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	5.2	2.1	8.7
도급, 용역, 위탁업체 산재예방 능력 및 기술평가 기준 마련	5.2	9.6	1.1
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, 청취 후 개선방안 마련	0	4.3	10.9
총계	100.0	100.0	100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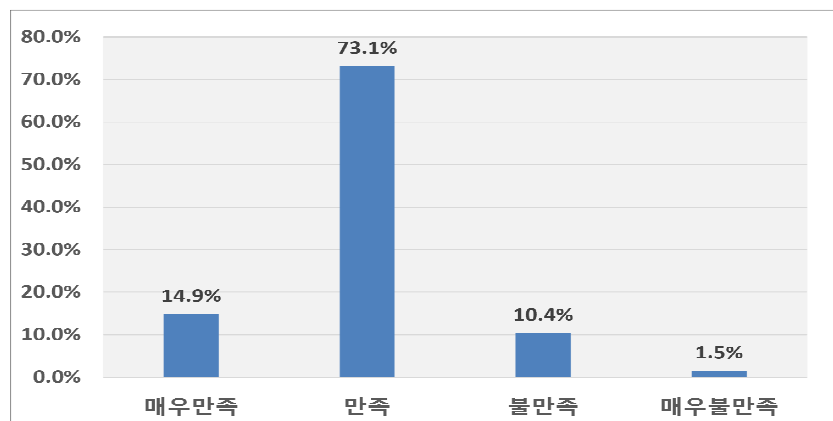
중대재해 대응 관련 정책 활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, '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'이 32.4%로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. 이어 '위험성평가 인정'이 22.3%, '안전일터조성지원'이 7.4%, '안전동행지원'이 6.1%, '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'이 4.7%, '정부 산업안전대진단 참여'가 4.1% 순으로 조사됐다. 반면 관련 정책을 활용해 본 적이 없다는 기업은 17.6%로 나타났으며, '기타'는 0.7%로 집계됐다.

<중대재해 대응 관련 정책 활용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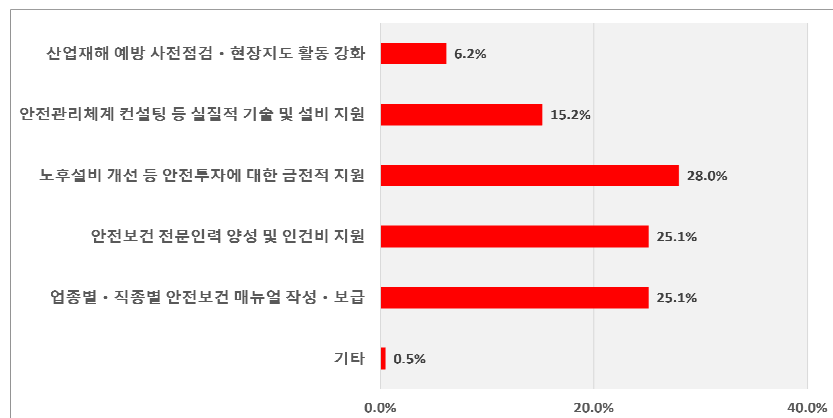
정책 활용 경험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, '매우 만족' 14.9%, '만족' 73.1%로 전체의 88.0%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.

<중대재해 대응 관련 정책 활용 만족도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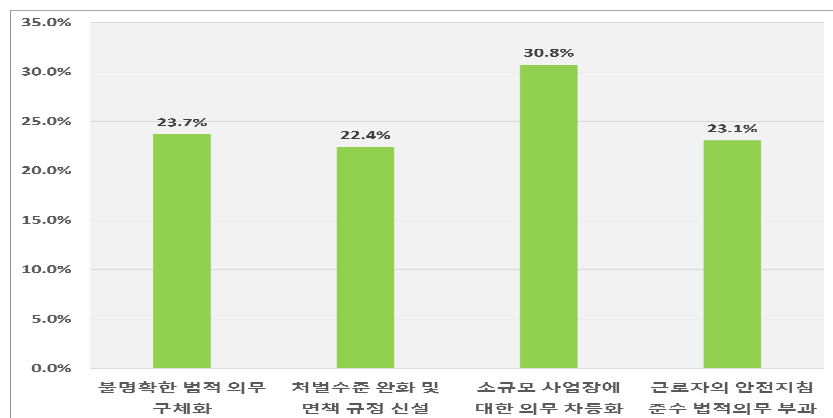
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으로는 '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'이 28.0%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. 이어 '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인건비 지원'과 '업종별·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·보급'이 각각 25.1%로 조사됐다. 또한 '안전관리체계 컨설팅 등 실질적 기술 및 설비 지원'은 15.2%, '산업재해 예방 사전점검·현장지도 활동 강화'는 6.2%, '기타'는 0.5%로 나타났다.

<중대재해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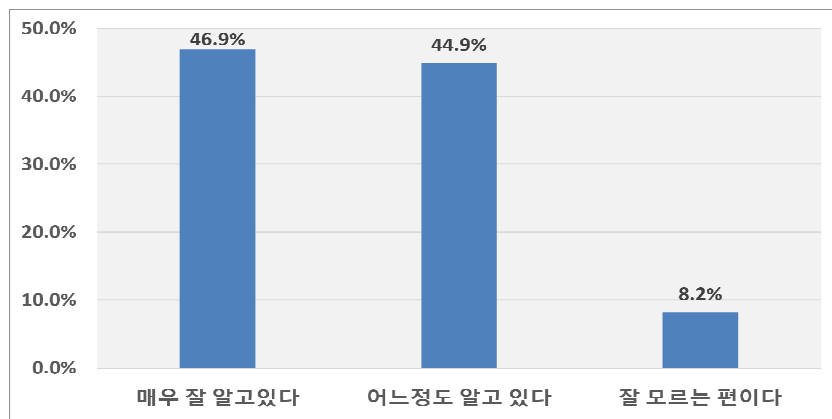
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는 '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의무 차등화'가 30.8%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. 이어 '불명확한 법적 의무 구체화'가 23.7%, '근로자의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'가 23.1%, '처벌수준 완화 및 면책 규정 신설'이 22.4%로 조사됐다.

<개선이 시급한 중대재해처벌법 내용>



위험성평가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, '매우 잘 알고 있다'는 응답이 46.9%, '어느 정도 알고 있다'는 응답이 44.9%로 나타나 전체 응답기업의 91.8%가 위험성평가를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 반면 '잘 모르는 편이다'는 응답은 8.2%였으며, '전혀 모른다'는 응답은 확인되지 않았다.

〈위험성평가 인지도〉



위험성평가 수행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'시간 및 인력 부족'으로 32.1%를 차지했다. 이어 '비용 부담'이 21.7%, '평가체계 구축의 어려움'이 19.0%로 나타났으며, '평가 후 개선조치 이행의 어려움'은 16.3%로 조사됐다. 이 밖에 '관련 자료나 매뉴얼 부족'은 10.3%, '기타'는 0.5%로 나타났다.

〈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어려움〉

